



技術士活用을 위한 政策의 必要性

A Necessity of Policy Issue for Professional Engineers Application.

朴 晷 珍*
Park, Kyung Jin

目 次

- 1. 머리말
- 2. 제도완화는 技術用役政策의 모순
- 3. 韓國産業政策은 日獨式을 受容해야 한다.
- 4. 政策완화는 産業發展을 역행.
- 5. 전문업체의 난립과 도산속출.
- 6. 국가 기술자격자와 학력자의 차이
- 7. “技能大 인기없다.” 기술경시 정책결과의 단면.
- 8. 맺는말

1. 머리말

지구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政府가 恒常 내세우는 科學技術立國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人이 正當한 대우를 받고 技術界의 最高자격자인 技術士들이 死藏되지 않고 다른 전문분야 자격자와 같이 잘 活用될 수 있도록 政府의 積極적인 制度확립이 必要하며, 현재 韓國의 社會저변에 깔려있는 尤敎사상의 잔재인 技術을 무조건 경시하는 분위기를 政府가 바꾸어 주어야 한다.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公務員職給의 명칭에서 技術職도 官字을 넣어 기좌 대신 “기술사무관” 기정대신 “기술서기관” 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사의 고용”에서 이 고용 대신 채용, 초빙, 활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기술경시의 언어문화를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도완화는 技術用役政策의 모순

소액입찰(몇천만원정도) 이라도 있는 날이

면 技術用役會社의 重要한 실무자인 대리와 과장들까지도 子會社入札人으로 동원되어 國家産業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技術人力들이 入札場所에서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는 서비스업을 억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서비스업인 技術用役業의 업체수 증가는 최근 1년에 300%의 증가를 보인 종목도 있다.

국민학교 교실보다 적은 18평정도의 면적이면 과학기술처에 등록하는 株式會社가 하나씩 생긴다. 社員들의 구성도 형식적이다.

앞으로 政府가 추진하는 技術用役會社를 登錄制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 그 혼란은 대단할 것이다. 통신분야와 같이 이미 국가기술자격자는 오직 기사1급 1명만 확보하여, 형식적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능력을 구비한 會社들과 同等한 자격으로 入札해온 경험이 있는자들은, 신고제로 완화되면 토목, 조정등등 수익성이 있는 모든 종목의 용역회사들을 신고하여 입찰 과정에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 電氣通信技術士, 技術士法推進委員·政策委員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형식적인 회사들을 만
들기만 하면, 정부에서 줄곧 관대했듯이 통제
가 별로 없을 것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었으며, 설상 규제를 한다하
도 불법회사들의 목소리가 크면 준수해야 할 법
과 시행령은 접어두고, 오히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한자들의 시너로서, 장관고시 등을 발하여
그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 목소리의 크기는, 용역시장을 무시한 부
당한 행정조처에 항의하는 선비와 같은 국가기
술자격자 보다 요령 좋은 비자격자의 로비의 목
소리가 훨씬 컸던 것이 용역업체의 현실이다.

설령 용기있는 기술사들이 政府의 現實을 무
시한 지나친 위법에 대해 지적한다 해도, 잘못
을 시인하기 보다는 시간을 끌다가 오직 보신
주의로 시행령 등을 개정하거나 장관고시로,
지적당한 문구를 변경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위
한방법이라고 변명한 후 타부서로 자리를 옮기
면 그만이었다.

이 편견에 치우친 잘못된 技術用役行政으로
형식적인 會社와 社長들만 늘어나고 용역성과
품은 저가입찰로 질이 떨어지며, 한참 일을 해
야하는 젊은인력들이 소액입찰장소에 몰려다
녀 국가노동력을 누수시키고 있는 것을 그들
公務員들은 모를 것이다.

기술사 대신 대부분이 정년퇴직 고령자인 고
급기술자로 완화하고도, 사후통제가 없어 고급
기술자가 10여개월씩 공석이어도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이상한 정부의 이상한 용역행
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韓國産業政策은 美英式보다 日獨式을 受容해야 한다.

1992年 2月 19日字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
되었지만 「아시아의 다음 巨人」의 저자인 앰스
덴 美 MIT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現在 美英

式 자유시장 모델을 무조건 受容하고 있는 “韓
國産業政策 全面修正할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韓國은 政府주도에서 美
英式 産業政策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美英式이 韓國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하고 政府의 개입이 必要불가결 하다고 주장하
며, 자율화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 政府와 企業
間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국내정황과 맞
물려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들어 美英式 자유시장접근
방법이 마치 한국산업정책의 바이블처럼 강조
되고 있는 근거로서, 美國에서 韓國實情에 맞
지 않은 이론치중의 교육을 받고온 경제학박사
의 급속한 공급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웃 日本과 비교해 美國에서 공부한 경제학
박사가 韓國이 훨씬 많은데, 그들의 이론이 옳
다면 韓國이 日本經濟를 앞서야 할것이다. 美國
에서 공부한 경제학박사 수를 일본과 비교하
면, 1988년에는 韓國人이 70명으로 日本人 12
명에 비해 6배이며, 89년에는 韓國人 88명, 日
本人 11명으로 무려 8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
게 인구가 많은 日本보다 몇배많은 한국인 美
國경제학박사가 70~90년간 800명이 넘어 미
국박사들 왕국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술자격자를 경시하고, 박사를 선호하는 韓國
的인 현실에서 획기적인 대우를 받기위해 다투
어 美國에가서 학위를 받아오기 때문일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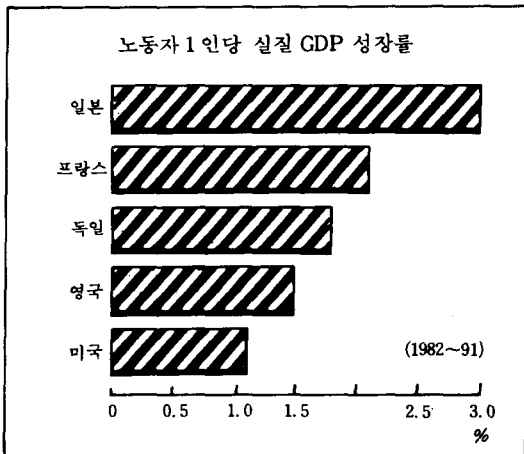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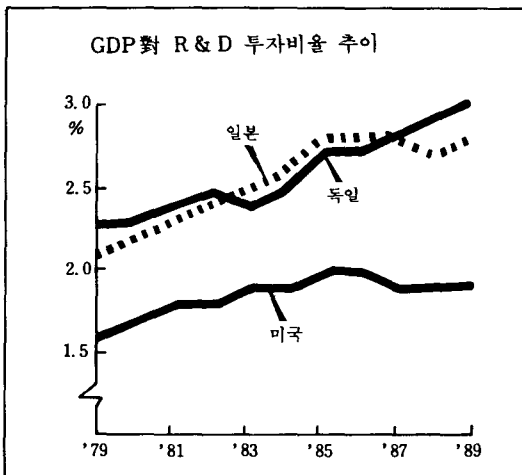
이 많은 美國경제학박사들이,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핵심과 경제기획원, 경제연구소 등등에
서 자율화를 외치며, 韓國의 현실과 괴리된 주
장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배워온 경제
이론이 韓國의 現實과 관계없는 뿌리없는 이론
중심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에서 기인되고 있다
고 한다.

이렇게 美 MIT대학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
한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技術士法과 엔지

니어링 技術振興法의 施行令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용역업이 되도록, 적절한 정부의 규제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韓國의 産業發展을 위해서는 日獨式 産業化 모형에 가까운 적극적인 政府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多幸이 政府에서도 정부규제의 必要性을 느끼고, 최근 KDI에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新産業政策」을 연구중이라하며, 또한 시장경제철학의 중주국인 美國에서도, 新産業政策의 필요성을 느끼고, 최근들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향하고 있다 한다.

아래의 그림은 産業政策에서 美英式 日獨式의 결과를 비교한 도표이다.



이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10년동안 美國의 노동자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액 (GDP)은 1.1%로 성장해온 반면 日本은 3배에 가까운 3.1%로 성장했음을 알수있다. 또한 日本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美國의 경우보다 거의 70%가 높다.

4. 政策완화는 産業發展을 역행

현실을 무시한 완화정책의 일면으로, 통신기술용역시장은 약 150억원 정도인데 會社數는 80여개로 늘어났다. 소위 入札用子會社만 늘어나 관리비와 인력낭비는 기술용역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만일 다른 종목에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없는 이미 고령으로 정년퇴직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경력자로 모두 대체한다면, 통신분야와 같이 난립되어 출혈경쟁과 도산이 속출할 것이다. 지방에서의 적은 입찰에도 서울역광장의 사람들같이 몰려든 입찰자들은 국력낭비의 현상이며, 과잉경쟁으로 오히려 기술발전이 후퇴하고 있다.

제2종합청사 공무원들이 많이 통과하는 사당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고장났다고 가정할 때, 그곳에 있는 교통순경들이 자동차통행을 자율화에 맡기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준법정신이 강한 미국보다는 더 차량운행이 힘들 것이다. 즉 미국과 한국은 문화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업체의 난립문제는 업체들끼리 해결하라는 말대신, 용역업의 지나친 난립과 혼란에는 당연히 정부가 교통정리를 하여 주어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권한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아니면 한국기술사회에 통제의 권한을 위임해 줄만도 하다.

5. 전문업체의 난립과 도산속출

위의 단어들은 최근 일간신문 첫면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돌파구가 없는 협소한 시장에 정부통제가 풀려 업체가 난립하면, 입찰에서의 출혈경쟁은 당연히 일어나고, 저가낙찰에서 이익을 남길려면 아무리 새로운 기술방법을 연구한다 해도, 설계등 생산품의 품질저하는 어쩔수없이 뒤따르는 악순환이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술인력은 일감을 확보 못해서 기술용역업을 떠날수 밖에 없다. 작년에 20%의 기술사가 용역업을 떠났던 종목도 있다.

사당사거리 교통경찰이 차량소통은 운전자에게 맞기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곳을 통과하는 제2종합청사공무원들은 그 경찰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아깝다고 할것이다. 이런 모순들은 먼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공무원범위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의 차이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의 차이는 한국에서만 특이한 차이라고나 할까? 학력자 우선주의의 政策的 배려속에서, 경력자를 技術士 대신 대치하는 반면, 같은 경력자는 박사를 대치할수 없다. 여러 국가자격자중에서 변호업무나 회계업무 등의 분야에는 과연 경력자가 없어서 대치를 못하는가(?) 아니면 이 자격자를 대치하는 권한은 과학기술처에서만 특이한 것이며, 법무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장관고시로 대치를 명할수 없는 부서인가(?) 같은 국가 같은 정부하에서 너무나 불공평하다.

國家技術資格者중 최고자격인 技術士의 위상이 흔들리면, 그 아래 자격자의 설 자리는 더욱더 없을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자의 수가 약 170여만명 이라면 그들 가족까지 합한 유권자수는 500만명 이상일 것이다. 이 500만 표의 유권자를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그러면 그 표의 행방은 어디로 갈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技能大 인기없다” 기술경시정책결과의 단면

위의 문구는 中央日報 92年 2月 12日字 신문기사 제목이다. 노동부가 98年 까지는 技能大를 14개로 늘리기로 하고 현재는 2개인 昌原과 仁川技能大의 新入生 유치를 위해 1월부터 홍보를 벌였는데도, 350명을 모집하는 昌原大의 경우 100명만 지원하여 마감일을 20여일 연기하고, 60여명 모집하는 仁川技能大의 경우 마감시간을 앞두고 14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만일 技能大가 아닌 세무대라면 지원생이 쇠도 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현상을 깊이 생각하고, 정부는 과감한 제도의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사 및 모든 국가기술자격자가 자신의 전공에 활용될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해야 한다.

즉, 전시적인 행정으로 技能大만 늘린다고 국가산업기술이 발전하겠는가, 모든 국민들은 노력한만큼 사회적인 대우와 긍지를 갖을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데, 선배기술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보고 技能大의 지원을 망서리는 것이며, 정부가 선호하는 인문계의 자격자 및 고학위자가 되기를 바랄것이다.

8. 맺는말

韓國技術士會의 임원들과 원로기술사들께서는 권한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 순환양들의 침묵 대신, 7000여명 기술사들의 나아갈 길을 위해 정부에의 건의와 언론매체에의 호소 등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現 金圭泰 會長任을 비롯한 몇분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모든 임원들이 지원과 협조를 할 때 큰 힘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고참순서에 의해 임원이 된 분도 있겠으나 나 아닌 다른 임원들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향해야 한다.

최근 1년에 두번의 技術士試驗의 실시로 회원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資格者로서의 活用을 할수 없을때는 技術士會를 외면할 것이다.

작년 8月の 提言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기술사들의 수평연대의식” 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國家産業發展을 위하여 實力양성과

자기개발에 계속 노력하여야 하며, 지금은 現時代에 맞도록, 조용하고 나약한 선비의됨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우리들의 내면의 소리를 外部로 분출하며 技術士들의 位相을 지켜나가야 한다.

성실한 사람은 운명을 바꾸고
근면한 국민은 역사를 바꾼다.

— 공업진흥청 —